

[2013년 노동시장 전망]

고용증가세 둔화, 노동시장문제 계속

2013.01.14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목차

1. 2012년 노동시장 평가
2. 2013년 노동시장 전망
3. 계속되는 노동시장문제들
4.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

새사연은 2006년에 설립된 진보적 민간 연구소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2012년 노동시장 평가

지난 2012년은 취업자 수 증가 측면에서는 2011년 이상으로 노동시장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고용지표 상으로 2011년은 2008년 말의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보인 시기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은 다시 59% 수준을 회복하였고,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는 기저효과와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가 주춤한 2012년에도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는 계속되었으며, 고용률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1] 연도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천명, %)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우측 축, 고용률은 좌측 축 참조

※ 2012년의 경우 1월에서 11월 사이 값의 평균치임

※ 자료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특히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증가폭이 2011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에서 11월까지

세사연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45만 1천명으로 2011년의 41만 3천명보다 더 많은 취업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8만 5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10년 6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나 한국은행, 경제개발연구원 등이 예상한 3% 중반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2%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2012년의 이와 같은 취업자 수 증가는 예상 밖의 결과이다.

경기침체에도 이런 이례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진 데는 사회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2011년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주춤하는 가운데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2011년 잠시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역시 2012년 다시 175만 명 수준을 회복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에 일조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2년에도 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운수업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역시 2012년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으로써 2012년에도 2011년과 같은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었다.

[표 1] 주요 산업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2011년
제조업	3,963	3,836	4,028	4,091	4,098	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675	5,536	5,469	5,492	5,595	103
교육서비스업	1,784	1,831	1,799	1,686	1,745	5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42	998	1,153	1,311	1,400	89
운수업	1,248	1,247	1,280	1,332	1,378	4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6	844	883	961	1,027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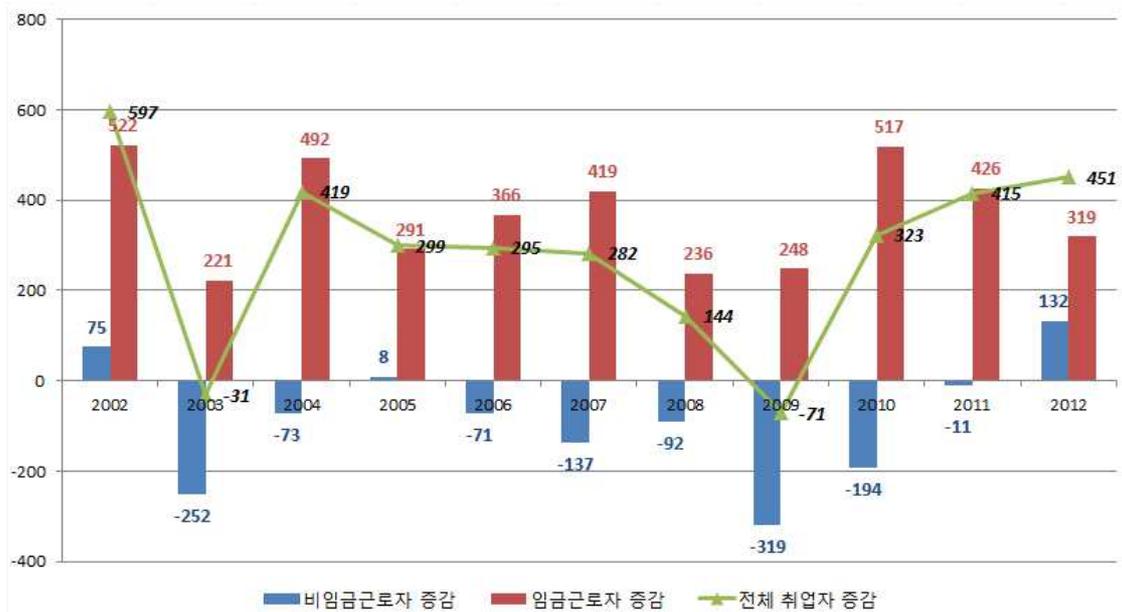
※ 자료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하지만 2012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2011년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비임금근로자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와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42만 6천명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1만 1천 명 줄어들어 41만 5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12년에는 임금근로자가 31만 9천 명, 비임금근로자가 13만 2천 명 증가해 45만 1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취업자 수 증대에 있어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작년 수준이었으면 2012년의 전체 취업자의 증가는 30만 명 초반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었는데, 2011년에 비해 13만 5천 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만 2천 명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임을 감안하면 자영업자가 2012년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친 영향을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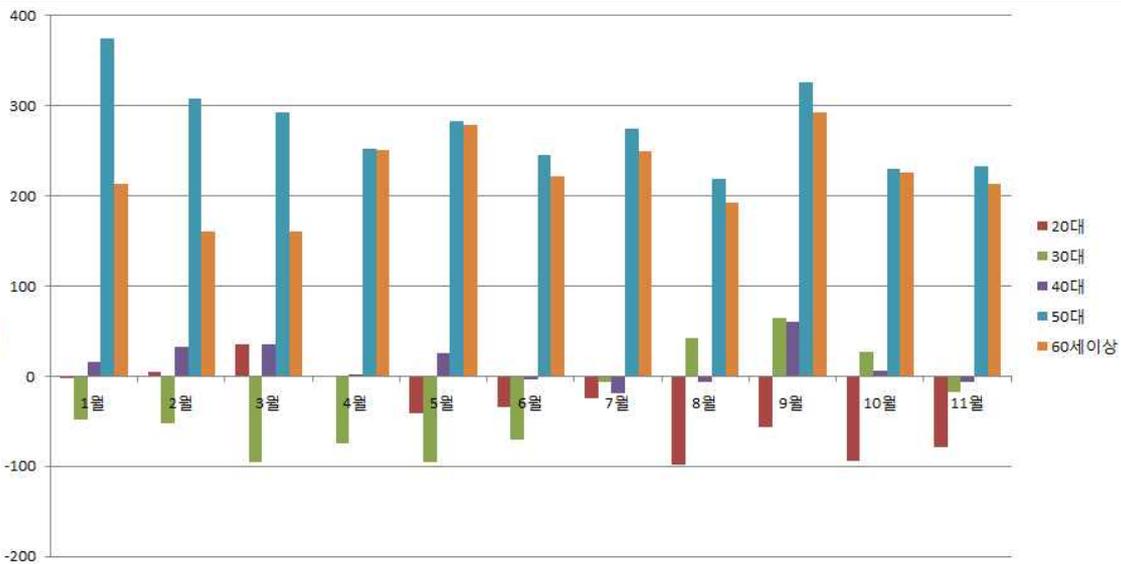
※ 2012년의 경우 1월에서 11월 사이 값의 평균치임

※ 자료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연령대별로 보면 2012년은 50세 이상 취업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진 한해였다. 전

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50대 취업자 수는 27만 6천 명이 증가했으며,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2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반면,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20대의 경우 전년동월과 비교해 3만 5천 명이 줄어들었으며, 30대 역시 3만 명이 줄어들었다. 40대의 경우 증가하기는 했지만 1만 3천 명에 머물렀다. 사실상 2012년의 취업자 증가를 이끈 것은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인 셈이다.

[그림 3] 2012년 전년동월대비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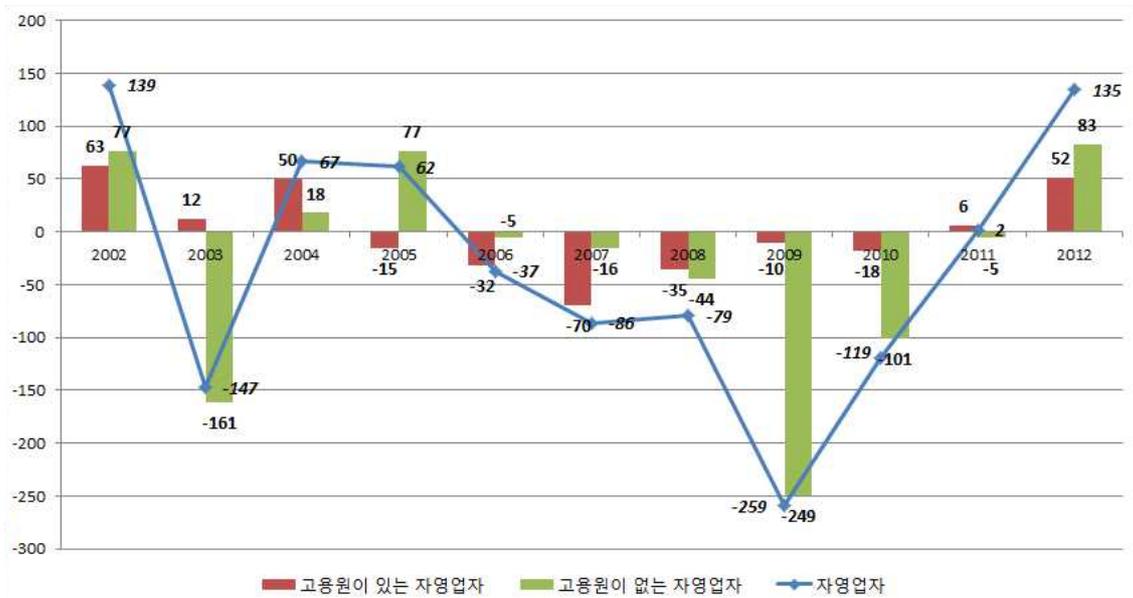
※ 자료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하지만 이와 같은 2012년 고용의 양적 확대와 관련된 특성들은 고용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을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한다. 즉, 고용지표 상으로는 양적 확대가 발생했지만, 질적 수준에 있어서는 오히려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먼저,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다른 서비스산업들 위주로 취업자 수가 증대된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작은 제조업의 고용이 둔화된 반면,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노동시장 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시켰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를 가져왔을 수 있다. 작년 가장 많은 취업자가 늘어난 50대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66.4%가 비정규 노동자이다. 이는 30대와 40대 임금근로 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중 33.7%, 42.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런 50대 취업자의 증가는 좋지 않은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60세 이상 취업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데,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88.7%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림 4] 연도별 자영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2012년의 경우 1월에서 11월 사이 값의 평균치임

※ 자료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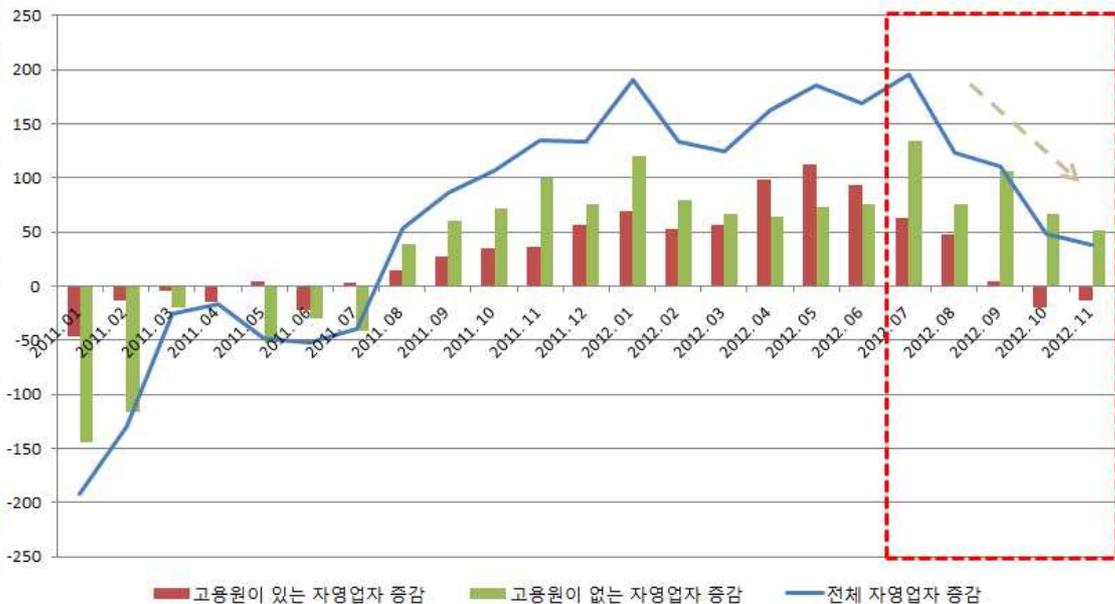
자영업자의 증가 역시 노동시장 내 좋지 않은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 증가의 상당수가 독립자영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13만 5천 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했는데, 그 중 고용원이 없는 독립자영업자는 8만 3천 명이다. 이들은 소규모 자본 창업을 통한 영세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나 유럽 등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 독립자영업자들은 비정규직 이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로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았던

이들이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2013년 노동시장 전망

2013년에는 2012년과 같은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2년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공급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12년에도 경기침체는 기업들의 노동수요를 줄였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하는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30만 명 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자영업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2011년 대비 45만 1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5]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명)



※ 자료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러나 2013년에도 3% 이하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이와 같은 노동공급의 확대에 의한 취업자 수 증가는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영업, 특히 독립자영업의 경우 경기침체 속에서 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

업자의 수가 2012년 하반기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년동월대비 증가추세 역시 크게 하락한 것은 이와 같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내수부진이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2013년에는 2012년과 같은 자영업자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증가가 2012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전체 취업자 증가는 기업의 노동수요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도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그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경기침체에 대한 예상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의 경우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2013년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의 예상 경제성장률 2.2%보다 성장률이 상승할 경우 노동수요가 2012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 등은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수요를 줄이고 신규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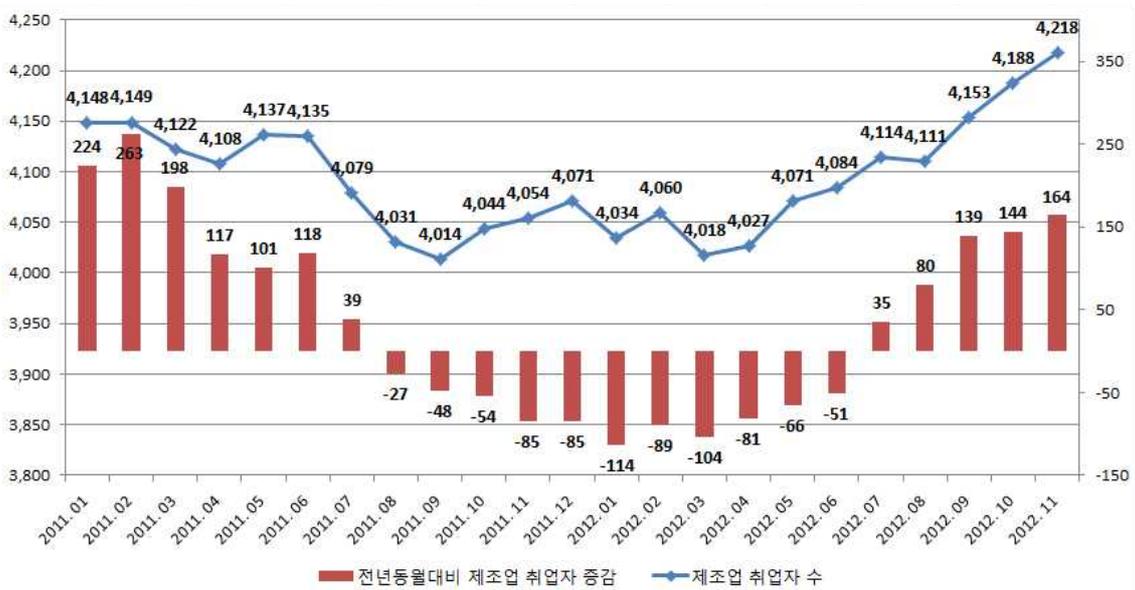
많은 연구기관들은 201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높지만 경기침체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3.0%), 한국은행(3.2%), 한국개발연구원(3.4%), OECD(3.1%) IMF(3.6%) 등은 대체로 201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 노무라 연구소와 도이치 뱅크는 2.5%를 전망치로 발표하였으며, 정태인(2013)¹⁾ 역시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은 국내 내수 상품생산을 위한 고용투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기침체가 내수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기업은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구조조정이 시행될 경우 취업자 증가세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세계경제 역시 선진국들이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작년과 같은 침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²⁾ 금융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의 부채축소, 금융시장 취약성, 고실업,

1) 정태인 (2013) 한국경제, '국민 행복시대'로 갈 수 있나?, 새사연 보고서

긴축정책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선진국 경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유럽에서 시작된 유럽지역의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성장률 저하로 인한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고용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6] 제조업의 취업자 수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명)



※ 자료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 증대는 2011년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11년 하반기 이후 410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2년 상반기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취업증가세를 이끄는 산업에서 취업증가세를 약화시키는 산업이 되었다. 하지만 2012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은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421만 8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 여경훈 (2013)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침체, 새사연 보고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이런 제조업 취업자 수는 다시 2012년 상반기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시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은 서비스업 고용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 이와 같은 세계경기 침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제조업 고용 침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업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2013년은 2012년과 같은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이 2012년보다 높아질 경우 이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고용증대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되는 국내 경기침체,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사라지지 않은 경제적 불확실성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노동 수요를 줄여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작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자영업의 경우 역시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2012년의 자영업 취업자 증가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영업에 고용된 인원이 있음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의 다른 노동시장 정책이 없을 경우 2013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20만 명 중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성장 국면이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을 보일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나 자영업 형태로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해 전망치 이상의 고용증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20만 명 이상 증가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의 고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도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의 저임금 비정규 고용 확대를 통해 고용의 양적지표를 개선시킨 바 있다. 그러므로 2013년 새 정부에서 해당 산업의 고용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 수준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3. 계속되는 노동시장문제들

2012년은 양적 고용지표는 확대되었지만, 산재한 여러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한해였다. 청년고용문제와 여성고용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역시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노동시장 문제들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201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고용문제

청년취업자 감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 내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청년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1997년 경제위기 직전 500만 명이 넘던 20대 청년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계속 감소해 2011년에는 36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증가추세를 보이던 절대적인 청년일자리의 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같은 주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감지되는데, 지속적인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표 2] 20대 청년층 주요 고용지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취업자	4,207	4,061	3,992	3,894	3,779	3,710	3,652
실업자	352	340	306	293	323	312	293
비경제활동인구	2,316	2,341	2,355	2,397	2,395	2,347	2,296
고용률	61.2%	60.2%	60.0%	59.1%	58.2%	58.2%	58.5%
실업률	7.7%	7.7%	7.1%	7.0%	7.9%	7.8%	7.4%
경제활동참가율	66.3%	65.3%	64.6%	63.6%	63.1%	63.2%	63.2%

※ 자료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이러한 청년취업자의 감소는 현재 청년고용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일자리의 부족은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학졸업장을 가지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확대는 청년빈곤층의 증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신용불량자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청년고용문제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 부족, 숙련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단기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청년취업자 수, 청년일자리 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도 금융위기 이후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선의 폭이 크지 않다. 이처럼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단기적이고 노동공급 위주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성과위주의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될 경우 2013년 역시 청년고용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하에서 기업들은 청년층의 신규고용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없이는 청년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취업자 감소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고용지표 개선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노동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업부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교육훈련 수준을 상승시키고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여성고용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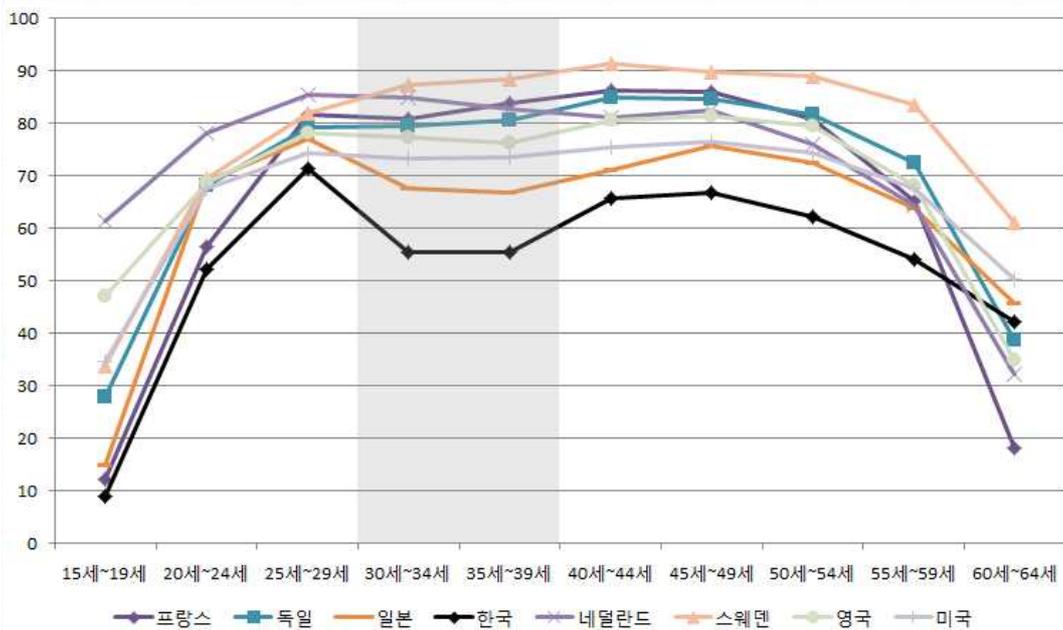
청년고용문제와 함께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다. 2012년 여성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천만 여성고용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0% 이상 차이가 난다. 2012년 11월 현재 남성의 고용률이 71.1%인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48.8% 밖에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낮은 여성고용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출

세사연

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그려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M자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30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경력단절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여성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OECD 주요 국가들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 자료출처 : OECD 홈페이지

이명박 정부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 재고를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육아휴직제나 보육비 지원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고용률 증진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노동수요 측면의 질적, 양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자를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여성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여성 노동시장의 현실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해보면 20대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7.3%인데 반해, 40대 여성은 61.6%나 된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 낮은 임금, 낮은 사회보장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현실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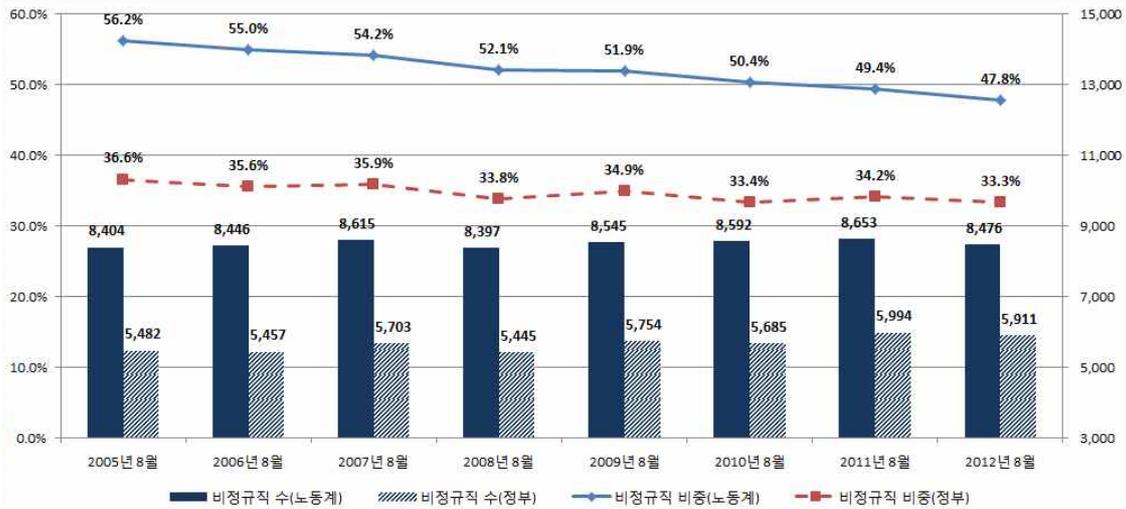
그러므로 50%가 되지 않는 여성 고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 노동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간의 사회서비스 상품 수요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은 노동수요 확대와 함께 여성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시장 불평등과 양극화

2012년은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은 그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였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에 머문 한해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자료를 이용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7.8%로 2011년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임금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7만 7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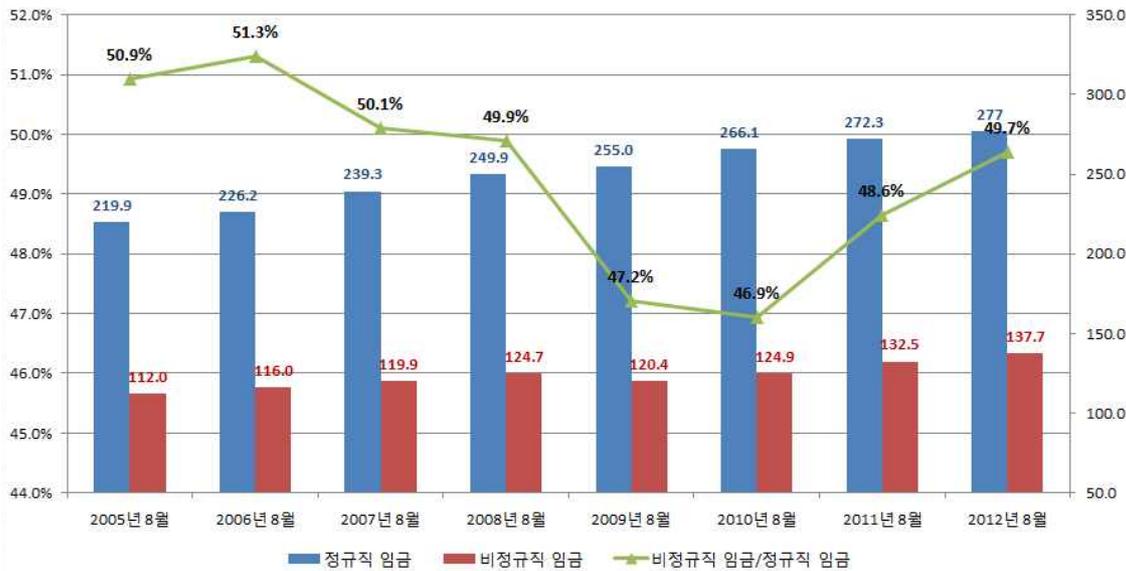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2013년에도 이러한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적 불확실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선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의 고용증대가 전체 취업자의 고용증대에 있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역시 이와 같은 우려를 하게 한다.

[그림 8] 각연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 추이 (단위 : %, 천명)



- ※ 비정규직 비중은 좌측 축, 비정규직 규모는 우측 축 참조
- ※ 통계청의 각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추산함

[그림 9] 정규직,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격차 추이 (단위 : %, 만원)



- ※ 비정규직 비중은 좌측 축, 비정규직 규모는 우측 축 참조
- ※ 통계청의 각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추산함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다른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2013년 작년과 같은 수준의 노동시장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가운데 고용성장세가 예상 이상으로 둔화될 경우 가구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저임금 노동자 증대, 빈곤문제 악화와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의 발생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민들은 고용지표 상에 나타나는 고용성장세 둔화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고용문제, 일자리 문제를 체감하게 될 것이며,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4.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해야

이상에서는 2013년의 고용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개입이나 외부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2013년에는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고용문제, 여성고용문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등과 같은 산재한 문제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작년보다 노동시장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이 새롭게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의 수정을 의미한다.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동안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들은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위협해왔다. 기업은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양산했고, 해고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고용의 질적 수준은 더욱 악화되었고, 좋지 않은 일자리 증가로 인해 청년고용문제와 여성고용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의 양적 측면의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정책은 단순히 고용지표의 양적 개선을 위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세사연

는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해당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고용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또한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빈곤상태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확대시켜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으로의 전환은 성공할 경우 고용의 양적 지표 개선이라는 성과와 함께 청년과 여성 등 노동시장에서 배제와 차별을 겪고 있는 이들과 관련된 노동시장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은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고용의 양적 지표 진작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여성고용문제 등 취업애로계층과 관련된 노동시장문제와 노동시장 내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제고를 추진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유연한 일자리 정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우리에게 더욱 적절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은 장기적으로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국민소득 증진 → 내수진작 → 소비진작 → 생산, 성장”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지금의 수출중심, 자산중심의 경제체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